

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
청년 발전 특별위원회



2017. 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 관련
추진 현황 보고

2017. 11.

서울혁신기획관

목 차

연번	분과	사업명	담당부서	페이지
1	수당	· 서울형 청년수당 전국화 및 니트청년 특화 대책 마련	청년정책담당관	
2-1	교통	· 서울시 대중교통 조조할인 적용시간 확대	교통정책과	
2-2	교통	·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청년분과 신설	버스정책과	
3-1	장애인	·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매뉴얼 개선 및 접근성 강화	재난대응과	
3-2	장애인	· 장애시민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교육·훈련 강화	재난대응과	
4	마음건강	· 청년 마음건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	청년정책담당관	
5	일자리	· 청년일자리 사업 특별점검 및 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	일자리정책담당관	
6-1	부채	·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	공정경제과	
6-2	부채	· 부채위기청년 긴급생활지원 사업	희망복지지원과	
6-3	부채	· 희망두배 청년동장 사업 개선	희망복지지원과	
6-4	부채	·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대상 확대	청년정책담당관	
7	시민교육	· 청년종합생활상담 오픈더도어프로젝트 추진	청년정책담당관	
8-1	주거	· 서울시-청년, 중앙정부에 청년주거권 보장 TF 제안	주택정책과	
8-2	주거	·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 지원 사업 개선	주택정책과	
8-3	주거	· 청년주거복지 상담교육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	주택정책과	
9	갭이어	· 서울형 청년 갭이어(GAP-YEAR) 지원 사업	청년정책담당관	

□ 2017. 서울청년의회 개최개요

- 일 시: '17. 7. 23.(일) 14:00 ~ 16:30 (서울시의회 본회의장)
- 내 용: 기초연설, 시정보고, 시정질의 및 정책제안, 사전·사후행사 등
- 참 석: 300여명
 - 서울시: 서울시장, 실·본부·국 관계자(6)
 - 시의회: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,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 시의원(11)
 - 청 년: 청년의원(102), 지역청년활동가,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
- 주 최: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,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
- 정책제안: 갭이어, 마음건강, 생활상담, 교통 등 10대 과제

□ 2017. 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보고

- 총 16건 제안(10건 수용, 3건 일부수용, 3건 장기검토)

분과	제안과제	수용여부
청년수당 (니트)	1. 서울형 청년수당 전국화 및 니트청년 특화 대책 마련	수용
교통	2-1. 서울시 대중교통 조조할인 적용시간 확대	장기검토
	2-2.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청년분과 신설	수용
장애인	3-1.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매뉴얼 개선 및 접근성 강화	수용
	3-2. 장애시민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교육·훈련 강화	수용
마음건강	4. 청년 마음건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	일부수용
일자리	5. 청년일자리 사업 특별점검 및 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	수용
부채	6-1.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	수용
	6-2. 부채위기청년 긴급생활지원 사업	장기검토
	6-3.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개선	일부수용
	6-4.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대상 확대	장기검토
시민교육	7. 청년종합생활상담 오픈더도어프로젝트 추진	수용
주 거	8-1. 서울시-청년 청년주거권 보장 TF 제안	수용
	8-2.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개선	일부수용
	8-3. 청년주거복지 상담교육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	수용
갭이어	9. 서울형 청년 갭이어(GAP-YEAR) 지원 사업	수용

□ 제안개요

- 서울형 청년수당 전국적 확산을 위한 TF 구성 및 활동
- 청년수당 참여인원 내 비구직·저활력 니트청년 참여 쿼터 마련
- 청년수당 비구직·저활력 니트 참여자 특화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

□ 검토의견 : 수용

- 서울형 청년수당 전국화 TF 구성 및 운영
 - 서울시, 시의회, 청년당사자,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
 - 우선 청년수당 관련 기관·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
 - 향후 공식 논의체로 발전시켜 청년수당 전국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협의
- 비구직 저활력 니트 청년 참여 촉진 및 활동 활성화 방안
 - ① 비구직 저활력 니트 청년 참여 확대
 - '18년 청년수당 대상자 확대를 통해 참여 기회 확대
 - 단, 쿼터제는 비구직 저활력 니트 청년의 기준, 대상자 현황 파악 및 청년수당 참여 촉진을 위한 유인 방안 등 검토 후 추진
 - ② 비구직 저활력 니트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
 - 일상 상담, 청년 마음 건강 상담 및 생활패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

□ 향후계획

- 서울형 청년수당 전국화 TF 구성·운영 '17.12월~
- '18년 청년수당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'18.1월~

2-1

서울시 대중교통 조조할인 적용시간 확대

《 교통정책과장 》

□ 제안개요

- 조조할인 시간을 **06:30 → 07:45**로 연장

〈 조조할인 개요 〉

- ▶ 시행목적 : 새벽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**요금부담 경감**과 **출근시간대 혼잡 완화**
- ▶ 시행시기 : 2015. 6. 27(토) ~
- ▶ 할인내용 : 06:30 이전 대중교통카드 이용객에 **기본요금의 20% 할인**
- ▶ 운영실적 : '16년 **7천 3백만명 173억원** 할인혜택

□ 검토의견 : 장기검토

- 조조할인 시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이 **요금할인 혜택**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**충분히 공감**하나,
- 혼잡시간대 승객 분산이라는 **조조할인 운영 취지**에 부합하지 않고, **추가적인 재정부담** 발생으로 더 이상의 **할인정책**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
 - **07:00 이후**는 혼잡시간대로서 연장시 **승객 집중**으로 인한 **혼잡 가중**
 - 연간 **약 354억원의 추가 비용** 소요(총비용 약 527억원)
 - 타 운송기관 **합의** 및 **조조할인으로 발생하는 환승손실금 보전** 필요
 - ※ 협의기관 : 17개 기관(경기도, 인천시, 한국철도공사, 공항철도, 신분당선, 경기철도(주) 등)

〈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현황 〉

- ▶ 대중교통 운영기관 운영적자 : **'16년 6,109억원** (지하철 3,917억, 버스 2,192억)
- ▶ 노후 전동차, 노후 및 안전시설 등 재투자 시급 : **'22년까지 3조 2천억원** 소요

□ 향후계획

- 재정여건 개선시, 조조할인 시간 일부연장(~07:00) 검토 가능
 - 무임손실금 국비 확보 및 요금조정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 개선시 시행 여부 검토

작성 자 교통정책과장 : 구종원 ☎2133-2210 교통재정팀장 : 전완상 ☎2232 담당 : 김영준 ☎2236

□ 제안개요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시민위원중 대중교통 이용률이 가장 높은 청년위원 (만 19세~34세)은 5%(37명 중 2명)에 불과
 - 대중교통 주 이용층인 청년의 대중교통 이용개선 관련 참여통로가 부재함에 따라 노선조정 문제,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, 안전사고 등의 각종 이슈들에 대한 시민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되지 못함
- 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균형적·효과적 개선을 위한 청년 참여 기구의 신설 제안

□ 검토의견 : 수용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분과는 분야별 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버스정책, 노선조정, 경영합리화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, 특정 연령이나 계층이 참여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
- 따라서, 현재와 같이 전문성을 고려한 분과위원회를 유지하되, 교통분야 등에 관심있고 전문적 식견이 있는 청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3명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(버스정책분과)에 위촉하였음
 - '17.08.16 :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(버스정책과 → 청년정책담당관)
 - '17.09.21 :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추천(청년정책담당관 → 버스정책과, 3명)
 - '17.10.01 :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청년위원 위촉(3명)

□ 제안개요

-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수요자 중심보완 및 배포처 확대
 - 생활권역 기반의 동사무소, 청년공간 등으로 확대
-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매뉴얼 개선 TF 구성

□ 검토의견 : 수용

-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매뉴얼 수요자 중심 보완 및 배포처 확대
 - 추진기간 : 2017. 9. 1 ~ 2018. 6. 30(10개월)
 - 구성인원 : 6명(청년의회 장애인분과 추천 3명, 서울소방본부 3명)
 - 업무과제 : 화재시 긴급피난 매뉴얼 리플렛용 개선 및 제작·배포
 - 배포장소 : 689개소(각 구청 및 동사무소, 119안전센터, 청년공간 등)

□ 향후계획

- 화재시 긴급피난 매뉴얼 개선 : '17.11월 ~ '18.2월
 - 기 제작·배포된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수요자 관점에서 보완
- 장애인 긴급피난 매뉴얼 제작 : '18.3월
- 장애인 긴급피난 매뉴얼 배포 : '18.4월(연중 상시 배포)
 - 생활권역 기반의 동사무소, 각 소방서 안전센터, 청년공간 등 비치 및 장애인의 날 체험부스 운영시 배포하여 활용성 확보

□ 제안개요

-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 대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
-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장애공무원,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에 대한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교육 및 훈련 의무화

□ 검토의견 : 수용

①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험교육 실시

- 교육장소 : 25개소
 -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(광나루체험장, 보라매체험장)
 - 안전체험장 23개소(서울시내 각 소방관서 - 성동소방서 2018년 설치 예정)
- 교육방법
 -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재난 체험을 통한 대피요령 습득
 -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험교육을 통한 재난대응교육 실시



※ 시민참여 방법 : 인터넷 및 전화예약을 통해 이용

- <http://safe119.seoul.go.kr/>, ☎ 보라매 2027-4100, 광나루 2049-4061
- 서울시내 각 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전화 예약문의

② 재난안전대응 교육 및 훈련 의무화

○ 다중시설 관계인 및 장애공무원 등 재난안전대응 교육 의무화 추진

- 현행법규 :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(소방안전교육)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(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)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제8조(소방안전교육)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
2.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 관리자 교육

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

- 검토의견

-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」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유도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
- 장애인 재난대응교육 필요시 시민안전체험관 및 관할 소방서에 사전예약 또는 협의 후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
-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재난대응교육은 재난안전실무 관리자과정 7시간, 실무자과정 14시간이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
- 재난안전실무 교육시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유도 교육을 실시토록 교육시간 확대 및 의무이수 방안 마련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유도 교육 실시 : 연중 상시
 - 서울시내 각 소방관서(24개서) 소방안전 교육시행
- 시민안전체험관(보라매, 광나루) 재난교육 : 연중 상시
 -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험교육 실시

제안개요

- 서울 청년 마음건강 전담팀 신설 및 인프라 구축
- 서울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도입
-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진단 및 서비스 이용 매뉴얼 제작·배포

 검토의견 : 일부수용

- 전담팀 신설 및 인프라 구축 관련
 - 청년활동지원센터내 전담 직원 배치 및 청년 특화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(가칭)청년 고민 상담 프로그램 운영
 - 다만, 서울시 부서내 전담팀 신설은 사업 추진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,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
- 서울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도입 관련
 - 청년활동지원센터 상담 프로그램외 청년 마음건강 평가서비스 확대, 심리지원 센터 및 민간 상담기관·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마음건강 상담 기회 확대
 - 사업성과 점검 후 상담채널 확대 또는 바우처 지원 등 체계적 지원 방안 검토
- 마음건강 진단 및 서비스 이용 매뉴얼 제작 배포 관련
 - 자가진단 및 공공 상담 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를 위한 매뉴얼 제작·배포 추진

 향후 추진계획

- 사업예산 확보 '17.12월
- 마음건강 관련 부서(기관) 업무협약 '18.1월
- 세부 사업 계획 수립·시행 '18.2월 ~

□ 제안개요

- 청년일자리사업 대상 청년참여 기반의 특별점검 실시
 - 뉴딜일자리사업, 일자리카페 사업 등 2017년 규모화된 청년일자리사업 대상 청년참여 기반의 특별 점검 및 조사 실시
- 서울시 청년취업지원사업 이해당사자(서울시-서울시의회-청년참여-운영기관) 협의체 구성을 통한 청년일자리사업의 질적 관리 제고

□ 검토의견 : 수용

-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 및 조사 실시(시행중)
 - 일자리 정책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: '17.8.18
 - ※ 시 일자리사업 특별점검단 구성 (전문가 및 청년단체 포함) 21명
 - 뉴딜일자리, 일자리카페, 강소기업 분야 특별점검 실시 : '17.8.16~8.26
 - 특별점검 결과 보고 및 개선안 마련 : '17.10월
- 청년취업지원사업 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·운영
 - ※ 주요 안건 : 뉴딜일자리, 일자리카페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청년취업지원사업 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·운영 '17.11월~
 - 운영자 및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추진

□ 제안개요

- 대부업 규제를 위한 전사회적 노력 제안
 -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,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전개, 불법사금융 피해구제

□ 검토의견 : 수용

- 대부업 규제 강화를 위해 **대부업 관리감독 및 교육 확대,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추진 등**
 -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: 합동단속 및 상시점검 강화, 모니터링단 운영
 - 교육 강화 : 대부(중개)업자 준법교육 및 자치구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
 -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: 미등록 및 불법 업체 상시 단속 강화, 온·오프라인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

□ 향후계획

- 대부업 관리감독 **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**
 - 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(반기 1회)
- **합동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**
 - 市·자치구 합동 점검 수시 실시(연중 수시)
 - 민생사법경찰단·중앙전파관리소 등과의 명절 전후 기획점검 실시('18. 2월, 9월)
- **대부업법 개정법령 관련 교육 실시**
 -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(반기 1회), 대부업자 준법교육 실시('18. 11월)
- **불법대부업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**
 -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으로 피해 예방 강화(상시)
 - 피해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(상시)

□ 제안개요

- 과다채무, 고액의 금융비용 감당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부채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지원

□ 검토의견 : 장기검토

- 『서울형긴급복지 사업』은 위기사항에 처하였으나 법적·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

〈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개요 〉

- 지원대상 :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

(단위 : 원)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기준중위소득 85%	1,404,991	2,392,282	3,094,778	3,797,273	4,499,768	5,202,264

- 재산기준 : 18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,000만원 이하

- 위기상황 인정 사유 :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

- 『서울형긴급복지 사업』은 연령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급박한 어려움을 당한 가구를 지원하는(4인 이상 가구 1백만원) 제도이므로 과다채무 청년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지원금액도 적고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
- 다만,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

□ 제안개요

○ 신청절차 간소화 및 자격제한 기준완화 필요

- 저소득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그 의미와 효과가 검증되었으나, 지원조건과 요구 서류들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다하여 자산형성이 꼭 필요한 청년들의 사업접근성을 저해
- 신청자 자산평가 시 부양의무제적 관점의 선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개별가계를 꾸린 청년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소외 문제 발생

□ 검토의견 : 일부수용

-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신청 제도 도입 검토
-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지양 및 사유명시, 개인정보 중복수집여부 점검 시행
-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하는 방안 검토

· 다만, 현행 80% 이하 기준을 150%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
 ※ 150% 기준 : 4인 가구 678만원 수준 / 경기도는 100%(4인 가구 452만원) 기준으로 시행중
 · 아울러, 부모소득 제외시에 더 지원이 절실한 청년이 탈락될 수 있으며, 신청자가 몰려서 행정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 필요
 ※ 지원대상을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하는 것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임

○ 기타 세부제안 관련

- 신청자 본인 증명사진 삭제 조치, 신청 목적에 '저축 목적' 포함하는 방안 적극 검토
- 가구 소득상황 및 가구원 소득 활동정보 :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확인시 필요하며,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개선

□ 향후계획

- 신청서식 간소화 등 제도개선안 마련 '17.11월~'18. 2월
 - 본인저축금액에 대한 시비 매칭지원비율 변경, 온라인 신청제도 등 추진
- '17년 신규 선발자 모집공고 '18. 3월

□ 제안개요

-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여 대학원생의 생활안정 지원
 - 고학력이 강요되는 시대에서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학비 부담으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 필요
 - 학자금대출 등 여러 부채들이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점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며 이 기간은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임

□ 검토의견 : 장기검토

-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이자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어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
- 다만, 대학원 보다 보편적 교육과정인 **대학생 이자 지원에서의 사각지대 우선 점검 후 대학원생으로의 확대 추진 필요**
-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**'18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 이후 지원 추진**
 - 지원 여부,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등 지원 범위 및 연차별 추진 계획 등 논의

□ 향후 추진계획

-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 개정 '18.상반기

□ 제안개요

- 청년이 사회진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(주거, 노동, 부채, 성평등 등)에 대한 기초적인 상담·교육 필요

□ 검토의견 : 수용

- 진로, 주거, 부채, 노동, 심리 등 청년기 복합적 문제에 대한 확인 및 전문 기관으로의 연계를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초기상담 필요성 공감
 - 청년일자리센터, 주거복지상담센터, 금융복지상담센터, 노동권익센터, 심리지원센터 등 주제별 전문 기관 기 운영중이나 접근성이 부족하고, 복합적 문제에 대한 대체 곤란
- '17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생활상담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, '18년에는 (가칭)'청년고민나누미'를 양성하여 복합적 문제에 대한 초기 상담 본격 추진
 - '청년고민나누미'를 통해 생활상담 및 심리상담을 아우르는 초기 상담을 제공하고, 구체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으로 연계
 - 전문 상담·교육 기관의 청년 특화 프로그램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의 지속 추진

□ 향후계획

-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사업예산 확보 '17.12월
- 세부 사업 계획 수립 '18.1월
- 청년고민나누미 선발 및 양성 등 사업시행 '18.2월~

□ 제안개요

- 공공주택 청년 입주자격 기준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와 청년이 파트너십을 맺어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청년주거권TF 구성을 중앙정부에 공동 제안
 - (단기) 청년공공주택 공급기준 현실화
 - (장기) 청년주거복지 정책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
 - ※ 추진방식 : 청년주거실태조사 => 입주희망청년층 수요조사 => 청년공공주택 공급기준 개선안 마련

□ 검토의견 : 수용

-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확대와 청년 입주자격 확대,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 등 중앙정부의 협력을 요하는 제도개선 필요
- 따라서 서울시와 청년이 함께 공급권한과 입주자격, 청년주거권 등 청년 공공주택 공급기준 변경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청년의회의 청년주거권TF 구성 필요성 공감

□ 향후계획

- 서울시-청년, 청년주거권 TF 구성(안) 마련 '17.10~12월
- 중앙정부에 청년주거권 TF 구성(안) 건의 '18.1월

제안개요

- 기존의 경직된 임차보증금 지원기준을 전월세전환율 등 현실에 맞는 유연한 기준으로 재설계
- 임차보증금 지원절차를 위험부담이 높은 선계약 후지원에서 선지원 후계약으로 조정해 개인의 위험부담 경감
-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청년당사자 간담회 추진

 검토의견 : 일부수용

- 임차보증금 지원기준 변경 관련
 - 대출금을 임차보증금의 80%이내 혹은 2500만원까지 확대하고 보증금과 월 차입금 금액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유연화 추진(협약기관 협의중)
- 지원절차 변경 관련
 - 선지원 후계약은 불가하나 사전검토제도를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발생 방지
- 청년당사자 간담회 추진 관련
 - 서울시-청년 TF 구성하여 간담회 진행

 향후계획

- 지원가능여부 사전검토제도 도입 '17.11월
-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'17.12월
- 임차보증금 주택조건 확대 '18.2월

□ 제안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월 ~ 12월
- 주요내용
 - 청년 대상 주거권교육, 주거상담 콘텐츠 수요조사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
 - 주거복지센터 내 주거권교육 및 주거상담 인력 배치 등 인프라 구축
 - 지역사회 내 주거권교육 및 주거상담 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

□ 검토의견 : 수용

-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등 주거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,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주거복지센터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공감
- 서울시-주거복지센터-청년(단체)간 청년주거복지지원협의체 구성(10명 내외), 교육·상담 콘텐츠 수요조사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('18.1월~3월)
- '1자치구 1주거복지센터' 확대계획(10→25개소)에 따라 추진중인 권역별 협의체에 주거권교육 및 주거상담 전담인력 1명 배치 예정('18.4월~)
 - 4월 이전 주거상담은 기존센터, 임대차분쟁상담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수행
 - 향후, 자치구별 교육 및 상담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여부 결정
- 다만, 주거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내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은 주거복지센터 교육·상담 수요와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시행

□ 향후계획

- 청년주거복지지원회의 구성 및 청년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'18. 1월~
- 맞춤형(청년 등)주거복지 교육 및 상담 실시 '18. 4월~

□ 제안개요

- 입시·취업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주체적인 생애 전망 탐색 기회를 매몰당한 청년층에게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갭이어(GAP-YEAR)의 경험과 시간을 보장하고, 다양한 진로 단절 계층으로 지원 확대

□ 검토의견 : 수용

- **청년수당 지원 사업과 연계**하여 청년기 갭이어 보장 시범사업 추진
 - 청년수당의 지원 목적인 '취창업 활동,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'을 위한 시간 보장 차원에서 청년기 갭이어 활동을 지원하고,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
- 청년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갭이어 추진을 전제로, **주도적 프로그램 탐색 및 활용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조력**에 주력
 - 스스로 적성탐색 및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퍼스널 브랜딩 및 컨설팅 지원 등
-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은 시에서 직접 제공하고, 민간의 우수한 프로그램 적극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갭이어 기회 보장
 - 자원봉사, 도농교류, 자기 주도적 학습 등 시정 주요 정책적 목표와 연결되는 프로그램 제공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방침 수립 및 예산 확보 '17.9~12월
- 운영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 발굴·공모 '18.상반기
-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시행 '18.하반기~